



쉽 없이 항진하는 저 별들처럼... 한리일보가 '도민이 만드는 도민신문'을 목표로 창간한지 31년을 맞이했다.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민의 이익을 위해 쉽 없이 달려온 세월이었다. 이제 풍요 속에 도민이 주인 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향후 100년을 응골지게 달려갈 것을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한다. 500년 동안 굳건하게 한 자리를 지켜온 팽나무 위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의 군무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서귀포시 표선읍 성읍리 일관원에서 서터스피드 30초 간격으로 3시간 동안 촬영한 후 합성한 사진이다. 강희민기자

“헌법 개정시 특별자치도 지위 확보 최선”

4·15 총선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 3인 특별대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위한 개헌 필요성엔 공감대 점진적 제도이양 통해 자치분권 강화 노력도 주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지역 당선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시 제주자치도의 지위를 명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특히 이번 4·15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당선인은 본보 창간 31주년 기념 특별대담에서 “도민사회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만의 헌법적 근거는

지역 형평성 논리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점진적 제도이양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당선인(제주시을)은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국회에서 개헌이 불성립되면서 불발됐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거뒀지만 개헌선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새로운 헌법 개정의 동력이 만들어지고 논의가 활성화된다면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당선인(서귀포시)도 “제주

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이 추진되면 반드시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 국회의원 당선인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길을 터주기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선거법개정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15총선 정당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3석, 더불어민주당 17석·열린민주당 3석·정의당 6석·미래통합당 84석·미래한국당 19석·국민의당 3석·무소속 5석이다. 범여권 진영 의석수를 합해도 190석으로 10석이 부족하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국민의당에서 10석을 확보

하면 개헌안 통과가 가능하다.

지난 2월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현재보다 헌법 개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갖고 있는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의 국민도 가질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지난 2월 국민 발안개헌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의원 148명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미래통합당 등 야권의 협력을 얻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리일보는 4월 22일 창간 31주년을 앞두고 지난 16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제주시갑 송재호·제주시을 오영훈·서귀포시 위성곤)들을 초청해 특별대담을 가졌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농업인 월급제’ 사업 전면 확대 시행

출하약정계약 80% 범위 내 월 30만~300만원 매일 지급 대상품목 전 작목으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중앙회 제주 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출하약정계약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30만원~300만원까지 선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도 행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사업에서는 4개 지역농협(조천·고산·한경·중문) 67개 농가에게 6개월간 1인당 평균 1107만4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는 대상 품목을 감귤, 브로콜리에서 전 작목으로 확대하며, 월급 지급 기간도 1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다만 참여농가는 농업경영체 및 농작물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드론 규제완화로 조기 상용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자 제주자치도 2년 연속 선정 상용 수준 서비스모델 구축

제주도가 드론의 조기 상용화와 이를 위한 규제 개선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주관기관:항공안전기술원)하는 2020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자로 2년 연속 선정돼 9억여 원의 계속사업비(전액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에 태양광 드론과 수소전지 드론 등 장시간·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가시권·야간·고고도 비행과 같은 드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실증뿐만 아니라 스마트 드론의 AI 기술을 적용해 행정혁신을 통한 상용화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선 올해 도심 안전 확보를 위한 도심 서비스에서 스마트 드론으로 자율비행을 강화하고, 해안 환경 모니터링 체계에서는 태양광 드론을 고도화하며, 한라산 장거리 구급서비스와 긴급구호물품전달 등에 수소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실증 성공을 바탕으로 도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안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며, 신규서비스 실증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제주시 변화가로 꼽히는 제주시 연동 누에마루거리를 중심으로 드론 순찰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안심 서비스를 구현한다. 연속 7시간 이상 비행 가능한 태양광 드론을 기반으로 제주도 해안선 258km를 따라 제주 전체 해안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전지드론을 활용해 한라산에 응급구호물품(AED 등) 장거리 배송 서비스를 추진하고 가스배관망 안전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안전한 드론 비행 지원을 위한 전파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한국가스공사, 유시스, 한국항공대학교, 이노랩, 울포랜드, 제이시스,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드론 순찰 등 공공서비스 추진을 위해 도 자치경찰단, 도 소방안전본부와도 협업하고 있다.

제주도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신청과 드론 기본계획 및 조례 제정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고대모기자

오늘 창간 31주년 특집호 24면 발행...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한리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현
장
중
심

...
적
극
행
정
...
공
감
소
통

제주의 밝은 미래,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